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관악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위원회
전 문 위 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2.
복지문화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이영빈 의원 등 8명
- 발의일자: 2023. 1. 20.(금)
- 회부일자: 2023. 1. 20.(금)
- 검토기간: 2023. 1. 25.(수) ~ 1. 27.(금)

2. 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나.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 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마.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

4.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간호인력의 권익 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바 하는 것으로,
- 세계보건기구는 2000년 3월 11일에 코로나 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을 공식 선포한 바 있고, 2023년 1월 25일 현재 전세계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는 6,747,780명에 달하고, 한국의 경우에도 사망자 33,270명에 확진자 30,040,556명에 달함.
- 특히 대구 인근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발발초기 대응인력 부족으로 공중보건 일선에 있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졌으며,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격무와 적정하지 않은 보상 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었음.¹⁾
-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알려지고, 간호인력 부족으로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음.²⁾
- 실제로 간호사 7,275명을 대상으로 간호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은 69.5%, 모성보호와 관련된 인권침해 경험은 27.1%, 1년간 성희롱 등을 당한 경험은 18.9%에 달해 간호인력 권익증진 등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함.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이직율은 2020년 전국평균 간호사는 19.7%, 간호조무사는 27.2%에 달하고, 대구의 경우 간호사 19.9%, 간호조무사 25.4%에 달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1) 2020년 국정감사, 코로나 현장 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보상체계 미흡 지적(국회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 2020년 10월 14일 보도자료

2) 파견 간호인력 선발기준 및 보상제시 촉구 국민청원 1만 5,000명 돌파, 의학신문, 2020년 12월 30일, 코로나19 영웅이라더니 간호사 77% 아파도 출근, 쿠키뉴스, 2022년 10월 28일 보도자료

2020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이직율

(단위: %)

구분	전국		서울		대구		경북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합계	19.7	27.2	17.4	30.2	19.9	25.4	19.8	21.7
남자	27.8	22.0	21.0	25.8	30.9	20.1	30.9	17.3
여자	19.3	27.4	17.2	30.4	19.3	25.7	19.0	22.0

※ 출처: KOSIS, 성별, 시도별, 의료기관 유형별 근무 간호사·간호조무사 이직율 2020년 현재

- 특히 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 제2항 및 제14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력등의 복지향상과 적정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 실정에 맞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우선하여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시설을 말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마. 그 밖에 보건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나 기관

3.4.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